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1>보 도 설 명</h1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 </div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20.9.8.(화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 홍 성 기 (02-2100-2610)	담 당 자	김윤희 사무관 (02-2100-2611) 정태호 사무관 (02-2100-2612)		
	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 (02-3145-8020)		황준하 팀 장 (02-3145-8030)		

제 목: 대손인정 관련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여부는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. [한국경제 9월 9일자 기사 관련]

1. 기사내용

- ☐ 한국경제는 9월 9일 조간(가판) 「‘폐인 돈’으로 처리한 개인대출금 – 은행, 이자 더 붙일 수 없게 된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금융당국은 금감원의 세칙을 바꿔 가산이자를 붙이지 않겠다고 확정한 채권에만 법인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. …… 금융당국은 개인 채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과 함께 세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.”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입장

- ☐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「소비자신용법안」에 대손인정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 - 다만, 향후 입법 추진과정에서 대손인정* 관련 금융감독원 세칙 개정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며,
 - * 현재 금융회사 채권이 추정손실로 분류된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대손인정
 - 이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